

# 전북도,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 속도

###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 사업 현장 방문해 추진상황·애로사항 청취

전북도가 '탄소규제자유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참여기관·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김희천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이 특구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날 31일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대진정공(주), 일진복합소재(주)를 포함한 특구사업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형선박과 수소이송용기, 소방특장차에 대한 추진상황 설명과 사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도는 지난해 7월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2월

까지 컨설팅, 적정성 검토 등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 내부 협약을 진행했다.

이번 김 단장의 현장 방문을 통해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공간에 규제 특례를 부여한 구역으로, 기업이 신기술로 신제품을 만들었으나, 관련 규정이 아예 없거나 각종 규제로 가로막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탄소복합재에 적용할 3개의 실증사업이 대상으로 ▲탄소복합재 소

형선박 제조 및 운항, ▲고압 대용량 탄소복합재 수소운송시스템, ▲탄소복합재 소화수 탱크제조 및 소방특장차 등에 대해 실증 사업이 시행된다.

당장 올해 12월에는 탄소복합재 소형선박(어선 9톤) 운항 실증 착수를 거치고, 내년 9월까지 수소용기운송 튜브트레이러와 탄소복합재 물탱크 적용 소방차까지 실증 사업을 모두 완료해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 사업의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실증사업, 탄소소재 적용 규정신설 및 규제 개정 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탄소특구의 성공여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유기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한 만큼, 기업 현장행정을 통한 애로사항 및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사업을 완성해 갈 계획이다.

전병문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탄소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완료돼 본격적으로 사업화되는 2023년 이후부터는 실증사업 탄소제품의 신규시장 진입이 확대돼 기업 매출향상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 산불감시·진화인력 1400명 집중배치·취약지역 예방활동 강화

봄철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청명(4일)·한식(5일) 기간을 전후로 입산자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이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오는 4월 18일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감시와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입산객들에 의한 부주의로 성묘객 실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400명을 집중배치하고, 감시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접어들어 논·밭두렁의 영농폐기물 소각행위가 성

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산불비상근무체계에 돌입, 산불감시와 마을방송을 통한 산불조심 계도방송을 1일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모악산, 내장산 등 도내 주요 유명산과 산불취약지역에는 임차헬기 3대를 이용한 공중 감시활동과 계도방송도 병행한다.

허진 도 환경녹지국장은 "현재 건조한 날씨와 기후 영향으로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기이고, 청명·한식에는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발생해 온 만큼, 모두가 산불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예방과 감시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상공의 날 기념식**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유공자 훈포장 수상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분야 공무원 역량강화 기술지원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대기 배출시설 지도·점검 강화와 시료채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기분야 시·군 환경공무원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지난날 31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도를 포함해 14개 시·군 환경공무원 30명이 참석했고, 대기 오염배출사업장 점검강화를 위해 자가측정대행업체의 정확한 시료채취 확인방법 및 올바른 시료채취기록부 작성요령 등 실무에 필수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술지원을 했다.

또한, 각 시·군별로 민감한 환경민원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각 시·군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

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연구원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해 미세먼지 전구물질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시·군 환경 담당자에게 당부했다.

유택수 연구원장은 "이번 교육은 일회성 교육을 넘어 환경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실무자들의 정보공유의 장으로써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과의 협으로 민원발생 예상지역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청정한 전북대기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생물 방역교육 실시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가 수산생물 양식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수산생물 양식자나 상업적 목적으로 수산생물을 전시·판매하는 자(수면적 1,000㎡ 이상),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관련 종사자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이상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방역교육은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산생물 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에 관한 사항, 수산생물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 수산생물 사체 처분, 수산물 의약품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인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한다.

전병권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수산생물 방역교육을 통해 수산생물질병의 올바른 이해와 인식 제고로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이 이뤄져 어업인들이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영농철 농촌인력 수급 총력

### 농업인력지원 상황실·농촌인력증개센터 29개소 운영

전북도가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한 농촌인력 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차질 등으로 어려워진 농촌인력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도는 지난 15일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어려워진 영농철 농촌인력 수급을 위해 도 및 14개 시·군에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와 농작업을 알선·중개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 29개소를 운영하며, 농번기 일자리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현재까지 농촌인력 지원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농촌인력증개센터 3,794명, 농기계 농작업 대행 116명 등 총 5,167명이 수급됐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4월 이후 인력 지원 실적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는 도시 구직자와 연계해 공공근로 탈락자의 인력 확보, 자원봉사센터 연계 등 영농철 농촌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와 협력해 도시구직자를 모집, 농작업 실습교육 후 농촌인력증개센터와 연계해 농촌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하는 '도시형 인력증개센터 사업'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시민이 보다 쉽게 도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도록 '내국인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파견업체가 도시 구직자를 채용한 후, 시설원에 등 상시 일자리 보유 농가에 1~3개월간 인력을 파견하는 시스템으로 파견 수수료 4대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접수

### 전북도, 5월 31일까지 견고추·노지감자·생강 품목

전북도가 올해 견고추, 노지감자, 생강 품목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을 통해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대표적인 산란농정 사업이다.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신청품목은 견고추, 노지감자, 생강 3품목으로 노지감자와 생강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견고추는 진안군과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을 체결하고,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산란농정 제때받는 농업 대표사업으

로 시작한 이후,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도는 농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기 위해 산란농정위원회의 유통분과 회의와 정책포럼, 관련 TF에서 농민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논의했다.

그 결과, 가격 등락폭이 가장 큰 8개 품목으로 확대, 계통출하처 확대, 기준가격 산출방식 개선, 2020년도 시장격리(산지폐기) 도입 품목 재배 농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차액 지원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런 변화의 결과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품목 1,628농가에게 약 64억원의 차액을 지원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체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자리 잡아가면서 타 지자체에서 문의와 견학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의 자기부담이 없는 보험제도로서 타 지자체가 표준모델로 삼는 산란농정 대표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발전을 위한 노력과 많은 농업인이 참여·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